

배포 일시	2023. 1. 5.(목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석기 (044-201-3646)
		담당자	서기관 정승수 (044-201-4733)
		담당자	사무관 신용화 (044-201-3651)
	세종특별자치시 대외협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 장민주 (044-300-6210)
		담당자	사무관 김산성 (044-300-6241)
	대전광역시 균형발전담당관	책임자	과 장 김태수 (042-270-3510)
		담당자	사무관 이호성 (042-270-3520)
	충청남도 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택중 (041-635-2810)
		담당자	사무관 김관동 (041-635-4601)
	충청북도 균형발전과	책임자	과 장 김선희 (043-220-4110)
담당자		주무관 서인배 (043-220-4113)	
보도일시	2023년 1월 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5일(목) 15:30분부터 보도 가능		

충청권 동반성장, 국토부가 원팀으로 협력

- ◆ 원희룡 장관, 연말 부울경에 이어 충청권 균형발전 협력 약속
- ◆ 국토부,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 제시
- ◆ 지리적 중심인 충청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기능 완성 지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.5일(목)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, 김태흠 충남지사, 김영환 충북지사,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-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·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, 부울경 1시간 생활권, 특화산업 거점육성, 세계 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,

-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 공유하고,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.
-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과 함께 “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”을 체결한다.
-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①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, ②핵심거점 간 광역·간선망 연계 강화, ③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.

행정과 균형발전 중심 충청권	광역·간선망 연계 강화	충청권 특화산업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 추진 2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3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개편 4 행정기관 충청권 이전 지원 5 공공기관 2차이전 기본계획 수립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대전-세종-충북 광역철도 적기구축 2 서해선-경부고속선 연결 예타추진 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착공 추진 4 천안-청주공항 복선전철 '25년 착공 목표 5 호남선 고속화사업 '26년 착공 추진 6 행복도시 광역철도 및 BRT 구축 7 대전 순환도로망 단계적 구축 8 당진-광명 민자도로 적격성조사 9 영동-진천(오창) 고속도로 사업방식 결정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지역 첨단산업 기반 마련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3 '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인프라 지원 4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거점도시 확대 5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'25년 준공

1. 충청권의 행정 및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

- 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,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다.
- 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,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.
- ③ 제2집무실,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. 미래교통,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·업무·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.

- ④ 수도권 행정부처,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, 「행복도시법」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- 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2.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·간선망 연계 강화

- ⑥ 대전-세종-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- ⑦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,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,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⑧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.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.
- ⑨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-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.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 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
- ⑩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.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,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.
- ⑪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-조치원, 오송-청주 광역도로(2구간)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,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.

- ⑫ 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, 기본·실시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,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하여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.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,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⑬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-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당진-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⑭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-진천(오창) 고속도로는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(민자 또는 재정)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(예타 또는 적격성조사 등)에 본격 착수한다. 위 노선으로 보은, 옥천,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.

3.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

- ⑮ 바이오,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.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,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,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,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.
- ⑯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(30만㎡이하 → 100만㎡ 미만)하고,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하여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.
- ⑰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충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, 교통인프라,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.

⑱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.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,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,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. 아울러,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.

⑲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·문화·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.

□ 협의회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“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” 면서,

○ “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,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” 고 강조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“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,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”이라며, “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, 충청권의 발전,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” 고 밝힐 예정이다.

□ 최민호 세종시장은 “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(場)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.” 며, “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.” 고 밝힐 예정이다.

○ “KTX 세종역과 대전~세종~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” 드리며,

○ “국회 이전,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~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~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('27)을 부탁드립니다.” 라고 할 예정이다.

-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“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,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” 며,
 - “수도권 공공기관 이전, 흥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” 하고,
 - “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,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, 예타면제 등 국토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” 고 밝힐 예정이다.
- 김영환 충북지사는 “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” 며 “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 성공 개최,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,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” 고 강조하며,
 - “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(신설, 연장, 전명개량), 동탄~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, 영동~진천(남북6축) 고속도로 건설, 충북 동부축(백두대간 연계) 고속도로 건설,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,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현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” 고 요청할 예정이다.
-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“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” 이라면서, “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.” 며,
 - “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,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,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, 호남 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.” 라고 밝힐 예정이다.